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janggrae2015@gmail.com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15:30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

-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난 1/19, 한국노총이 '915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강요와 종용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연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 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하지만 오늘(1/2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재벌에겐 역대 최고의 고성과자이고 국민에겐 역사상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하여 재벌 청부업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2일(금) 15:30,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3. 참가 :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 박석운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장 / 정수용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하승수 녹색당 위원장 등

※ 문의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 최재혁(010-4740-9143), 대변인 박점규 (010-9664-9957) 끝.

2016. 1.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고를 명령한다

조작과 사기로 점철된 이 합의는 무효다.

바로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타협 파기 선언을 한지 72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노동부장관이 오전에 잡혀있던 노사간담회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강행한 졸속적인 최종안이다. 완력과 협박으로 윽박질렀던 915노사정 야합에 적혀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스스로 파기한 명분도 없는 지침이다. 우리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 발표된 이 지침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 지침이 실행된다면 사측 일방이 결정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는 더욱 고된 환경에 내몰릴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정한 인사지침이라고 하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저들은 이 재앙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정답이 정해진 설문조사, 대본을 들이밀며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시도했고, 조작된 간담회를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 지침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과 기업주를 배불리기 위한 재벌청부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침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정부 3년, 그 어디에도 노동자·서민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위안부 굴욕협상을 통해 역사를 왜곡했으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2대 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을 통해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자 한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앞에서는 고성과자다.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노동정책이 "쉬운 해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법안임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무시했고, 본인들이 만든 명분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겠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국민과 국회를 협박한다. 재벌들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거리에서는 재벌의 청부업자로 전락해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제도

를 도둑처럼 강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자면 최우선 해고 대상은 저 곳 청와대에 앉아있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해, 노동자와 청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이지만,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이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하여 재벌 청부업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기습적으로 노동자 전체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벼랑 밑으로 내던진 저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다.

2016. 1. 2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